

‘한 나라 두 사회’ 백신 의무화에 쪼개지는 유럽

스위스·프랑스 등 강제
‘사회 배제’ 불만도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가 최근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각국이 교육정책으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 상당수 국가는 접종을 강제하는 백신 패스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들 국가는 백신에 반감을 드러내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CNN방송은 16일(현지시간) ‘우리는 현재 두 계층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유럽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수 집단이 배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시위에 참가하게 된 스위스와 프랑스 시민을 각각 소개하며 백신 접종자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미접종자를 집중 조명했다.

슈퍼마켓 점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니컬러스 리몰디는 그동안 시위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그를 거리로 떠민 것은 스위스 정



백신 접종 훈련받는 약사들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도 뒤셀도르프의 한 호텔에서 16일(현지시간) 약사들이 식염수와 마네킹 팔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연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부의 백신 패스 정책이었다.

그는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공공 생활에서 배제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나처럼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더는 사회 일원이 아니다”라며 거리를 뛰쳐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반해 스위스 국민 상당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스



봉쇄 조치 항의하는 시위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내에서 16일(현지시간)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는 가운데 “당장 정상으로 환원하라”는 팻말을 부착한 트랙터가 서 있다. /AP=연합뉴스

위스 정부의 백신 패스 관련 법은 작년 11월 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2%의 찬성을 얻었다.

스위스(인구 877만명)의 백신 접종률은 총 인구의 기준 68.4%로 다른 서

유럽 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유명 프랑스 수학자 브루노 쿠르셀도 코로나19를 전후로 삶이 크게 바뀌었다.

최근 백신·봉쇄 반대 시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과 입장이 다른 주변

가족, 친구, 동료들과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쿠르셀은 자신의 시위 참여를 이해 못하는 일부 친척과는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인구 78%가 백신 접종을 마친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존 보건증명서를 백신증명서로 강화하는 법안은 이날 하원을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날 파리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을 성가시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유럽 최초로 내달부터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날 시민 2만7,000여 명이 수도 빈 중심가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현지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응답자의 51%가 반대해 찬성(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잔 석스 스위스 루가노 대학교 교수는 CNN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매우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개인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화산분화·쓰나미 직격 통가, 인명피해 보고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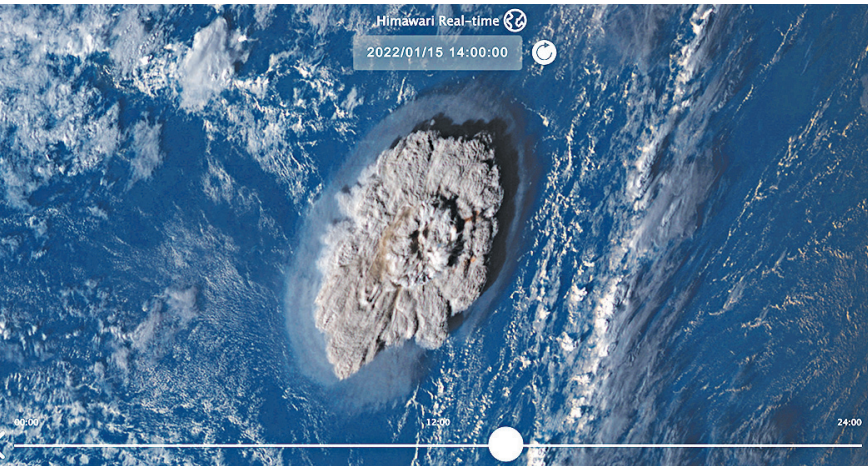
IFRC “최대 8만명 영향”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가 역대급 규모의 화산분화와 이어진 쓰나미(해일)의 직격타를 맞았지만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여태 확인되지 않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태평양 장관은 이날 호주 ABC 방송에 출연해 “다행히 현재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상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주변 섬들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통가 일대 도로와 교량 등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 방송 역시 현재까지는 통가에서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규모 사망·부상자 발생 여부와 별개로 통가 주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케이트 그린우드 태평양 대표단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화산 분출이나 이로 인한 쓰



15일(현지시간)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화산 ‘홍가 통가 홍가 하파이 화산’이 폭발해 거대한 화산재 구름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일본 기상청의 히마와리 8호 기상위성이 촬영한 사진이다. /일본 기상청 제공

나미, 침수 등으로 통가에서 최대 8만명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통가 제도의 다른 섬들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들은 통가 전역이 두꺼운 화산재로 뒤덮여 “달 표면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통가 주민들은 화산재로 수원이 오염돼 식수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국 해안경비대 올해 첫 센카쿠열도 순찰

중국 해안경비대가 올해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를 순찰했다고 1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 해안경비대는 지난 15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해안경비대 1301함이 다오위다오 열도 영해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순찰에는 해안경비대 함정 4척이 동원됐으며, 1시간 넘게 항해했다고 전했다.

또 교도 통신을 인용해 중국 함정에 기관총 같은 장비가 장착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은 다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점점 더 많은 순찰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해안경비대의 기능이 강화되고, 영토 주권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즈강 하이풍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일본 주요 매체들이 올해 첫 순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해양경비대의 순찰은 정기적이고 평소와 다른 것은 없었다”면서 “일본 언론들은 다오위다오 열도 문제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켜 일본 보수세력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이며, 중국 해군은 최근 몇 년 사이 매달 1~2번꼴로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공개하며 자국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해 2월 중국 정부가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시행하자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여성 시위대에 최루액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서 시위하던 여성들에게 최루액을 뿌렸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성 시위대 수십명은 카불대 인근에서 ‘여성의 인권’, ‘평등과 정의’, ‘자유, 교육·취업 권리’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최근 카불 서부 소수민족 하라족 거주지에서 결혼식을 끝내고 이동하다가 탈레반의 총격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여성 자이나브 압둘라히의 죽음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그러자 곧이어 탈레반 대원이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일부 대원은 여성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최루액 분사기)를 뿌렸다.

시위에 참여했다가 최루액을 맞은 한 여성은 “오른쪽 눈이 화끈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줄 알라’고 말했다”며 “그러자 탈레반 대원이 나에게 총을 겨눴다”고 말했다.

최루액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 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